

사망보험금 미리 써도 월 38만원… 요양비엔 ‘보탬’ 수준

m-커버스토리

노후 돌봄비 해법

초년도 지급액 연평균 455.8만원
시설 이용료는 월 250만~480만원
연간 비용의 7.9~15.2%에 그쳐

연금에 보태는 보조 수단으로 한계
리츠·펀드로 시설 원가 낮추고
재가서비스·공적 안전망 넓히려

월 250만~480만원의 비용이 드는 보험사 요양시설을 개인의 보험자산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초기 계약의 초년도 지급액은 평균 455만8000원으로, 시설 이용료와 규모를 단순 환산하면 연간 비용의 7.9~15.2% 수준이다. 실제 요양시설 이용자의 총당 실적은 아니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돌봄비를 보태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중간 가격대 시설의 부채를 대신할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조 현금흐름’

요양돌봄비는 보유자산의 총액보다 매달 꺼내 쓸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다. 보험연구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7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5538만원이지만 금융자산은 9099만원으로 16.4%에 그쳤다. 80대 이상은 자산 3억6229만원 가운데 금융자산이 5001만원, 13.8%였다. 평균치라 자산



Chat GPT에 의해 생성한 보험자산과 돌봄비의 격차, 방문 돌봄의 역할 이미지.

격차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령층 자산이 실물자산에 묶인 구조는 선명하다.

정부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쓰게 하는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5개사에서 시작해 올해 1월 2일부터 대상 계약을 보유한 19개 생보사로 확대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출시 초기 실적을 보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신청은 1262건, 초년도 지급액은 총 57억 5000만원이었다. 한 계약당 평균은 연 455만8000원이었고 금융위는 이를 월 환산 약 37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 유동화 비율은 89.4%, 지급 기간은 7.8년이었다.

초기 평균 지급액을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보험사 시설 이용료와 같은 연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격차가 선명하다. 시설비는 연 3000만~5760만원인 반면 유동화 초년도 지급액은 455만8000원으로, 규모로는 시설비의 7.9~15.2%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지급재원은 종신보험에 쌓인 해약환급금이며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다. 유동화한 만큼 유족에게 남는 사망보장은 줄어든다.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대상 종신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는 이용할 수 없다. 보험·연금·주택을 묶어 돌봄 현금흐름을 설계하더라도 자산이 없는 노인까지 포괄할 공적 안전망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요양비 전체를 해결하는 상품이라기보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보태는 보조 현금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수령액뿐 아니라 유동화 뒤 남는 사망보험금과 지급

기간을 함께 비교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시설 원가 낮추야

수요자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과 함께 공급 비용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은 전국에 같은 일당 정액수기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부동산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도심 시설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토지·건물 소유에 따른 기회 비용을 반영하고 비급여 수입을 제외한 분석모형에서 서울 시설은 월 800만원 적자, 경남 시설은 월 2000만원 흑자로 추산됐다. 실증분석에서는 지가가 10% 높을수록 장기요양 1·2등급자 대비 잔여 정원 비율이 2.3%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토지·건물의 귀속임대료를 법정부담으로 분리해 대도시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 유인은 커질 수 있지만 부동산 비용을 이용자에게 넘기면 중산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달래마가 남는다. 공급 확대와 가격 접근성을 동시에 잡으려면 다른 비용 절감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시설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다. 운영사가 민간 부지를 장기 임차하거나 건물 전체를 빌리는 마스터리스, 요양시설을 담은 헬스케어 리츠·장기요양 인프라펀드를 허용하면 보험사 자본이 토지와 건물에 묶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사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전문 운영자와 장기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이용료 인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건물 비용을 낮

춰준 효과가 중간 가격대 병상 공급과 이용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시설 입소 수요를 낮추고 살던 집에서 지내는 기간을 늘리는 재가돌봄은 돌봄 공급의 다른 축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남 영암의 80대 독거노인 사례를 보면, 골절 수술을 받은 이 노인은 퇴원 뒤 곧바로 장기 입소시설로 가지 않고 ‘중간 집’에서 단기 집중서비스를 받았다. 이후 방문 복약지도·운동과 주거환경 개선을 거쳐 자택으로 돌아갔다.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6월 26일까지 4만6215명이 신청했고 3만7304명이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제공 서비스는 가사·이동 등 일상생활돌봄 43.1%, 건강관리·예방 19.7%,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방문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 시설 중심의 보험사 요양시설 공급 확대는 소득 계층 간 돌봄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산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요양 시설 부동산은 리츠나 펀드가 보유하고, 보험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운영자·투자자·보험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면, 보험회사의 자본이 시설 소유에 과도하게 묶이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국산 P-CAB 3총사, 인도·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자큐보, 인도 품목허가 권고 획득
케이캡, 미국 FDA 허가 절차 진행
팩수클루, 적응증·제형 확대 추진

국산 신약인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치료제 ‘자큐보’가 14억 인구 대국 인도로 행보를 넓히면서 케이캡, 팩수클루 등 국내 P-CAB 삼총사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온코네티라퓨틱스는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우선 인도 의약품 시장에서 ‘자큐보’(사진) 임상 3상 성공, 상업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자큐보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이다. 앞서 올해 6월 임상 3



상을 마무리하고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한 상황이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올해 안에 인도 최종 품목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인도를 향후 핵심 시장으로 꼽는다. 인도 인구는 14억 명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경제 성장, 식생활 변화 등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온코네티라퓨틱스는 해외에서 자큐보 상업화에 선제적으로 속도를 내왔다. 자체 판매는 물론, 마일스톤, 로열티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2023년에는 중국 리브존 파마슈티컬과 중화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맺었고 이어 2024년 멕시코 등 남미 19개 국가에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북유럽 5개 국가에선 유통 판매 파트너십을 확보했다.

자큐보의 올해 2분기 국내 처방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어 256억원이다. 2024년 10월 출시부터 7개 분기 연속 증가한 기록이다.

국내 P-CAB 시장 선두 주자인 HK이노엔의 ‘케이캡’은 글로벌 영토 확장에서

도 질주하는 모습이다.

특히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동시 승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케이캡은 올해 2분기 완제품 수출로 전년 동기 대비 337% 급증한 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역시 89억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연간 수출 매출 127억원의 70%를 달성했다.

이로써 같은 기간, 국내 매출 감소도 방어했다.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가 연동 환급금 회계처리 변경으로 매출 차감 방식이 적용된 영향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 ‘팩수클루’ 매출 정상화에 나선다. 올해 2분기 팩수클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줄어 140억원이다. 대웅제약은 유통 채널 재정비, 일시적인 재고 소하 등의 여파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적응증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역류성 식도염 등 4개 적응증 허가를 완료했고 추가 3개 적응증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주사 제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다.

국내 신약개발 관계자는 “주요 제약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해외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상업화는 약물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홈플러스 ‘급여 순연’ 놓고 노사 충돌… 합의 여부 공방

2000억 DIP 투입 앞두고
사측 “처우 조정에 뜻 모아”
노조 “임금 순연은 미합의”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임직원 처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임금 순연은 미합의”라며 반발해 진통을 겪고 있다. 긴급운영자금(DIP) 투입을 앞두고 회생의 분수령을 맞

이한 상황에서 노사 간 잡음이 불거진 모양새다.

2일 일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양대 노동조합(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일반노조) 및 직원 대의기구인 한미음향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유동성 부담 완화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밝힌 조정안에 따르면, 9월 지

급 예정인 정기 상여금은 6개월간 균등 분할 지급되며,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던 최대 12개월치 기본급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환 근무 시 지급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 역시 6개월 분할 지급으로 조정됐다. 특히 임금의 경우 내년 3월까지 2개월씩 순연 지급하기로 해, 당장 7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자금 경색을 막는다는 계획이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처우 조정을 바탕으로 일부 점포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메리츠금융그룹 등으로부터 수혈되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상품 공급을 안정을 도모하고, 핵심 점포 67곳을 신선식품 및 자체 브랜드(PB) 중심으로 전환해 재개장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그러나 발표 직후 마트노조·홈플러스지

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상여금 분할 지급 등 일부 고통 분담에는 협조하고 있으나, ‘임금 2개월 순연 지급’은 노사 합의 결과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제안에 불과하다”면서 “임금 체불 건까지 합의된 것처럼 언론에 포장해 알린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측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정성 있는 회생 노력을 보이지 않고 일방적 회생만 강요할 경우 법적 고소를 포함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